

대선 이후 미국 경제정책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윤영교 (yoonyk@kdb.co.kr)

- ◆ 美 경기부양법안은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세부 의견 차이로 의회 통과 못한 상황
- ◆ 美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가능성 높아 향후 민주당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 부담 요인이지만 경기부양법안은 바이든 정부 출범 전후로 시행 가능성 높음

□ 美 민주당과 공화당은 경기부양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법안 미통과 상태

- 민주당 법안인 HEROES act(2.2조 달러)와 공화당 법안인 HEALS act(1.1조 달러) 모두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황
 - HEALS act는 '20년 7월, HEROES act는 10월에 발의했으나 구체적 사안에 차이
- 개인소득보전 정책이 경기부양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은 양당이 동일
 - 개인 대상 현금지원 대상 기준 및 금액에 대한 사항은 1차 경기부양법인 CARES act와 동일*하게 유지
 - * 연소득 75,000달러 이하 개인에 대해 연간 1,200달러 지급
- 개인 현금지원을 제외한 항목의 지원 기준 및 금액은 공화당이 상대적으로 보수적
 - 부양가족 현금지원, 실업급여 추가지급*, 중소기업급여무상지원에 제시한 금액은 공화당안이 민주당안의 1/3~1/2 수준
 - * 공화당은 과도한 실업급여 지급이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방점

코로나19 대응 미국 경기부양대책 비교(현금지원 정책 부분)

	CARES act (20.3 발효)	HEROES act (민주당)	HEALS act (공화당)
전체 규모	2조 2,000억 달러	2조 2,000억 달러	1조 1,000억 달러
현금지원	·연소득 75,000달러 이하 개인에게 연간 1,200달러 현금 지급	·CARES act와 동일	·CARES act와 동일
부양가족 현금지원	·16세 미만 부양가족에 대해 인당 500달러 지급 ·24세 미만 대학생 제외	·나이 제한 없이 모든 부양가족에 대해 인당 1,200달러 지급, 가구 당 6,000달러 제한	·나이 제한 없이 모든 부양가족에 대해 인당 500달러 지급
실업급여	·실업급여에 주당 600달러 추가	·CARES act와 동일	·실업급여에 주당 200달러 추가
중소기업급여 무상지원프로그램	·6,650억 달러 예산을 중소기업 무상대출 형태로 지급 ·1,3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남았으나 8월 8일 종료	·CARES act 대비 추가로 300억 달러 예산 할당 ·분기별 수익이 25% 이상 감소한 200인 미만 고용 중소기업에 2차 대출 허용	·직원수가 300인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만 지급

자료 : 미국 의회, KOTRA

□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상원,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 부담 요인

-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상·하원 선거 결과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였으나 상원은 민주당의 안정적 장악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
 - 상원 선거 결과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을 확보, 조지아주는 과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어 주법(州法)에 따라 '21년 1월 5일 결선 투표 예정
- 예산은 상·하원 모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제시했던 경제 정책 공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
 - 오바마(민주당) 집권 2기('13~'16년) 당시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며 정책 추진력 약화
 - * '12년과 '14년 선거에서 공화당(민주당)은 하원 의석을 각각 242석(193석)과 234석(201석) 확보
 - 바이든 당선인의 청정 에너지 부문 육성은 공화당 지지기반인 전통 제조업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공화당과 협의 과정에서 마찰 발생 가능성 상존
 - * 청정에너지 정책 추진시 에너지 원자재 가격 하락에 의한 관련 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 2차 경기부양안은 이르면 연내, 늦으면 '21년 2월 중 통과될 가능성

- 미국 정부는 3월 CARES act를 통해 2.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을 실시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접근하지 못함
 - 소비부양 효과가 있는 실업급여지원과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이 각각 7월과 8월 종료
 -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재차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시장 회복은 부진*, 4분기 이후 소비 감소로 이어질 소지
 - * 미국 비농업부문 총 고용자 수(만명): 15,246('20.2)→13,030('20.4)→14,237('20.10)
-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성공하더라도 고용시장 회복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차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양당의 공감대 형성 가능
 - 연준은 9월 FOMC 당시 미국의 예상 실업률을 '21년 5.5%, '22년 4.6%로 제시, 고용시장 충격이 완전 해소까지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
 - CARES act 영향으로 '20년 미국 가계 실질가처분소득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며 소비회복을 견인, 극단적인 경기침체 장기화 방어에 기여
 - * 미국 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은 4월에 16.5%, 5월에 10.7%를 기록해 '00~'19년 평균치(2.5%)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6~9월 증가율 역시 5.4~8.9%를 기록
 - 3분기 경제지표는 호조를 보였으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 이르면 연내, 늦어도 '21년 2월까지 2차 경기부양안 통과 전망 우위